
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혁신하는 해양산업, 도약하는 대한민국 -

2023. 1. 4.



해양수산부

순서

I. 추진성과와 평가	1
II.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2
III. 2023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	4
IV.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	12

I. 추진성과와 평가

1 주요 정책 성과

- **(해운·수산)**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과 창출
 - 우리 해운산업은 역대 최대 매출액 돌파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, 수산식품 수출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(31.6억불, 전년대비 11.8% 증가)
- **(민생안정 도모)**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일반국민·어업인 지원 확대
 - 일반국민들의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수산물 **상생할인행사** 개최 (총 10회, 610억원), 정부 **비축물량**(6개 품목) 수시 방출('22.7~)
 - 어업인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**유가연동보조금** 지급('22.6~, 464억원)
- **(2030 세계박람회 지원)** 부지 적기 제공 + 해외 유치활동 전개
 - 부산 북항 재개발 **1단계** 사업의 **랜드마크 부지 분양** 추진, **2단계 사업 예타 통과**('22.10) 등을 차질없이 추진
 - 태평양도서국 정상·각료급 면담('22.7, '22.10, 총 10개국)을 통해 **3개 국가의 공식지지 획득**('22.11~12)

2 개선 필요사항

- **(해양공간 이용)** 해상풍력 발전, 바다골재 채취 등 대규모 해양공간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업자,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 지속
 - ⇒ 이용·보전 가치의 **비교형량** 등 **합리적 입지 선정**을 위한 제도 필요
- **(차세대 해상물류)** 자율운항선박, 디지털 해상교통시스템 등 기술 개발 노력에도 불구하고, 경쟁국과의 **기술격차***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
 - * (자율운항선박) 노르웨이와 4년, (디지털 해상교통장비) 日·유럽과 2년 격차 발생
 - ⇒ 기술 개발 확대, 인·허가 규제 혁신, 국제표준 주도를 위한 국제 협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**속도감 있는 지원** 필요

II.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 추진 여건

- **(전통해양산업)** 경쟁 심화 + 불확실성 증가 ⇨ 산업 고도화 필요
 - (해운·항만)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무역 둔화와 선박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해운 경기는 하향 국면에 진입
 - (수산) 웰빙식인 수산물 선호 증가로 세계 시장은 증가세* 예상되며, 수산업 전 과정(생산·유통·가공)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 향상

* 세계 수산식품 시장규모(Global Data): ('21) 2,461억불 → ('26) 3,050억불

 - **(신해양산업)** 기술발전 + 포스트 코로나 ⇨ 신성장동력 발굴
 - (해양모빌리티) 4차 산업혁명 기술,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규제 등으로 스마트·친환경 해양모빌리티 시장 확대
 - (해양관광) 일상회복으로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, 관광 트렌드는 '대규모·실내 → 소규모·야외' 중심으로 전환*

* 소규모, 즉흥여행 수요 증가, 목적지로 바닷가 선호(한국관광공사, '22년 관광트렌드 분석)

 - **(섬·연안)** 열악한 정주 여건 + 재해 위험 증가 ⇨ 선제적 투자 확대
 - (어촌소멸) 도시·농촌 대비 낮은 소득, 한정된 일자리, 부족한 생활 서비스 등으로 섬·어촌 지역 소멸* 위기 심화

* ('15년 대비 '21년 인구 증감률) 전체 1.0%, 농가 △7.3%, 어가 △26.9%

 - (연안재해) 우리바다는 기후변화가 **빠른 속도***로 진행되고 있어, 태풍,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(9년간 1.5조원) 증가 예상
- * 표층수온 : '68~'20 1.27°C ↑(세계평균 0.53 ↑) / 해수면 : '90~'19 2.6mm/년 ↑(세계평균 2.0 ↑)

2 업무 추진 방향

비전 및 목표

“ 단단하고 든든한 신해양강국 ”

- 해상수송력 : ('21년) 9,300만톤 → ('23년) 1억톤 → ('27년) 1억2천만톤
- 수산식품 수출액 : ('21년) 28억불 → ('23년) 35억불 → ('27년) 45억불
- 해양레저 관광객 : ('21년) 948만명 → ('23년) 1,100만명 → ('27년) 1,500만명
- 어가소득 : ('21년) 5,200만원 → ('23년) 5,500만원 → ('27년) 6,500만원

단단한 해양산업

1. 국제물류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

- ▶ 불황기 대비 경영안전판 마련
- ▶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
- ▶ 해운산업의 시장기능 활성화
- ▶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
- ▶ 항만배후단지 복합산업공간 조성
- ▶ 글로벌 물류 공급망 구축

2.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

- ▶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
- ▶ 콜드체인 유통체계 구축
- ▶ 고부가 식품개발 및 인프라 조성
- ▶ 천만불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
- ▶ 집중형·연계형 수출마케팅 강화
- ▶ 스마트 양식기술 ODA 확대

3.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

- ▶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
- ▶ 해양모빌리티 국제표준 선점
- ▶ 신기술 상용화 및 산업 육성

4. 지역기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

- ▶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및 K-마리나 루트
- ▶ 기업·지역 상생 해양레저관광 발전
- ▶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산업 거점 구축

든든한 국민생활

5. 살기좋은 섬·연안 조성

- ▶ 섬 거주민 생활서비스 지원
- ▶ 저소득 주민 소득안전망 구축
- ▶ 어촌지역 활력 인프라 확충

6. 기후변화 대응, 재해 안전 연안 조성

- ▶ 연안 재해 예·경보 시스템 구축
- ▶ 항만·연안 재해 안전시설 완비
- ▶ 미래형 재해 대응시스템 개발

Ⅲ. 2023년 부처 핵심 추진과제

1. 국제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

◇ 서비스 분야 1위 산업인 해운산업의 불황기 대응력을 강화하고,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·배후단지 확충

* 해운 외화가득액(372억불, '21) > 해외건설 수주액(306억불, '21) > 방산 수주액(170억불, '22)

① 불황기 대비 3조원 규모의 해운 경영 안전판 마련

- 유동성 확보,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“위기대응펀드” 조성(최대 1조원)
- 중소 해운사 대상 투자·보증요율 인하, 경영안정자금 지원(0.3조원)
- 과다·유휴 선박 헐값 해외매각 방지를 위해, 공공기관이 ‘先 매입 後 임대’하는 공공 선주사업 추진('26년까지 50척, 1.7조원)

② 수출 주도 경제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

- 국적 해운사 선복량을 27년까지 30% 확충하여 수송력 강화
 - * ('21) 9,300만톤 → ('23) 1억톤 → ('27) 1억 2천만톤
-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해운사-화주간 상생협력체계 구축
 - 우수 선화주 인증제 대상 확대(정기선→부정기선) 및 법인세 감면 특례 정비(요건 완화, 규모 상향) 추진
 - 해운사와 업종별 화주협회간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('23, 시범사업)

③ 해운산업의 시장기능 활성화

- 대부분 공적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, 핀테크 기술 접목('23.下, 활성화 방안 마련 발표)
- HMM 경영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민간 이양 여건 마련

4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

- 부산항 신항,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पोर्ट로 본격 개발('23~'29)하여 화물처리 속도를 35% 제고하고, 환적화물* 유치 확대
 - * 제3국간 수출입 화물을 중계 유치한 것으로 '22년 1.9조원의 부가가치 창출
- 가덕도 신공항 개장시 트라이 포트(Tri-port)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,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('23~, 타당성 검토)
- 인천항 신항,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(자동하역·무인수송) 조성(~'26)

5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1.4조원 유치, 복합 산업공간으로 조성

- 신규지정, 산업단지 전환 등으로 배후단지 공급을 '30년까지 2배 확대
 - * ('22) 1,569만㎡ → ('23) 1,761만㎡ → ('30) 3,126만㎡(여의도 면적의 10.8배)
- 화물 적치 자동화, AI 기반 재고관리 등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
 - * (인천항) '21~'24년, 400억원 / (부산항) '22~'25년, 887억원
- 전 주기 과감한 규제 혁신*으로 글로벌 기업, 유턴 기업 유치
 - * 위험·유해시설 外 모든 업종 허용, 물류기업의 제조업 겸업 허용, 유턴 기업 인센티브 제공

6 글로벌 물류 공급망 확보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

- 미국, 동남아 등 거점 항만의 터미널, 공동물류센터 추가 확보
- 국내기업의 '이라크 알포항 건설(1.3조원) 및 위탁운영' 수주를 지원하고, 사우디 등 중동지역 해양·항만 프로젝트 수주 확대 추진

'23년
중점과제

- ▶ [정책] "부산항 진해신항 추진전략" 발표('23.6)
- ▶ [법률] 항만배후단지 규제완화를 위한 「항만법」 개정('23.6)
- ▶ [정책] "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" 수립('23.下)
- ▶ [정책] "해운물류 공급망 기반 강화방안" 마련('23.下)

2. 수출형 블루푸드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

◇ 수산물 수출액 30억불 돌파 성장세를 이어, 김·참치를 "수출 10억불 스타식품"으로, 굴·전복·어묵·연어 등을 "수출 1억불 클럽"으로 육성

* 김(6.6억불)은 '식품산업의 검은 반도체'(수산식품 수출 1위, 세계 김시장 70% 점유)

1.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

○ 민간 투자 기반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(6개소) 조성

* 부산(23, 연어), 경남(24, 바리류), 전남(24, 새우), 강원(24, 연어), 경북(25, 연어), 제주(26, 넙치)

▪ 지역대학, 기업, 청년 창업인 등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와 유통·가공 등 연관 산업을 집적한 배후부지로 구성

○ 굴, 전복, 연어 등 우량 종자 개발 및 최적 생육 알고리즘 확보

2.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 구축

○ 노후 위판장 100개소('23년 6개소)에 저온·친환경, 위생 가공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 위판장 운영체계 도입

▪ 유통 전 과정(입고·선별·경매·포장)에서 실내온도 10℃ 이하를 유지하고, '27년까지 연근해산 80%를 저온 환경에서 처리

○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으로 교체(90만개)하고, 저온차량 보급

3. 최신 소비트렌드를 고려한 가공식품 개발 및 인프라 조성

○ 가정 간편식(HMR), 상온 유통(어묵) 등 고부가 식품 개발('22~'24, 105억원)

○ 가치소비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식품* 기술을 개발하고, ESG 경영 목적 투자기업과 연계하여 제품 상용화(~'27, 10종)

* 해조류를 활용한 대체 수산물, 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수산 배양육 등

○ 권역별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(~'26, 목포·부산) 및 IoT 기반 스마트 가공 종합단지 조성(~'26, 새만금),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('23.2, 3개소)

4 블루푸드 천만불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

- 성장 사다리 바우처* 제공으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·육성
 - * 시장조사, 브랜드 개발, 마케팅, 국제인증 취득 지원(114개사, 기업별 최대 2.2억원)
- 공동물류센터 확대('22, 23개국 → '23, 25개국), 무역지원센터('22년 7개국) 운영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수산식품 수출 원팀* 가동
 - * 해수부를 중심으로 수협, aT, 수산무역협회, 한국수산회, KMI 등 수출 지원기관 참여

5 블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형·연계형 마케팅 강화

- 해외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, 소비시즌(美 블랙프라이데이, 中 광군제) 연계 할인행사 'K-씨푸드 글로벌 위크' 개최
- 한류를 테마로 부처간 협업사업*을 통한 유망 소비재(화장품, 의약품, 패션의류, 농식품 등) 연계 마케팅 강화
 - * 해외홍보관 운영, 한류마케팅 지원, 부처 합동 한류박람회 등

6 스마트·친환경 양식기술 ODA 및 국제협력 확대

- 알제리(사하라 사막)에서 성과를 거둔 친환경 새우 바이오플락* 양식기술 ODA 사업을 중동 등 사막, 열대 지역으로 확대 추진
 - * 물고기의 배설물 → 미생물이 섭취 → 미생물 성장 → 물고기가 성장한 미생물 섭취
- 베트남 맹그로브숲 패류, 인니 고부가가치 어류(나폴레옹 피쉬) 등 수혜국 맞춤형 스마트 친환경 양식기술 ODA 실시 및 추가 발굴**
 - * 해수부-산림청 합동 ODA사업으로 맹그로브숲 주변에 친환경 패류양식 지원
 - ** 물 부족국 : 아쿠아포닉스(양식 + 수경식물) / 해수온도 상승국 : 고온에 강한 어종

'23년
중점과제

- ▶ [정책] "세계시장 선도 수산식품 육성 전략" 수립('23.3)
- ▶ [정책] "스마트 양식 기술개발 로드맵" 마련('23.6)
- ▶ [행사] "K-씨푸드 글로벌 위크" 개최('23.11)
- ▶ [사업] "부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" 준공('23.12)

3. 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겠습니다

◇ **해상물류 4.0 시대, 스마트·친환경 기술 전쟁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여, 해양모빌리티산업 글로벌 시장('30년 741조원 전망) 선점**

1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

-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(~'25, 587억원) 및 실증센터 구축('23, 울산)
- 저탄소(암모니아, LNG)·무탄소(수소) 친환경선박* 핵심기술 개발
 - * 암모니아·LNG·하이브리드 등('22~'31, 2,540억원)
- ①초정밀 위성항법기술 개발 및 ②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구축

2 디지털 친환경 기술·소재·부품·장비의 국제표준 확보

-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고,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구(IMO) 기술협력 및 개도국 ODA 강화
 - * 미래연료 프로젝트, 디지털 해상교통관리 및 항로표지 시스템 구축 등
 - 기술개발 → “국제표준화” → 상용화 →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
 - * 해양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위해 UN 산하 국제해사기구(IMO) 기준에 반영 필요

3 해양모빌리티 신기술 조기 상용화,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

- ①인·허가 특례, ②인증 간소화 등 규제혁신으로 상용화 촉진
 - * ①신기술 선박 시험운항시 특례적용으로 개별법에 따른 인·허가 절차 면제
 - ②설비인증시 정부의 4단계 절차를 민간의 1단계로 간소화(상용화 기간 1년 단축)
- 친환경 선박 건조·이용(선주·화주)을 위한 보조금(선가의 10~30%) 및 금융 혜택(최대 3.4% 금리 우대) 지원으로 시장 창출(~'30, 528척 전환)

'23년
중점과제

- ▶ [정책] “국제해운 탈탄소화 대응전략” 수립('23.2)
- ▶ [행사] “국제해사기구 공동 한국해사주간” 개최('23.6)
 - * 기후위기 대응·탈탄소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“서울선언문(장관급)” 채택
- ▶ [법률] 「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」 제정 ('23.8)

4.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

◇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,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로 국민 여가를 지원하고, 국내외 관광수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지원

1.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및 K-마리나 루트 조성

- 놀거리(레저), 볼거리(관광·예술), 쉴거리(리조트), 먹거리 등 다양한 **융복합 해양 콘텐츠**를 **원스톱** 제공하는 **지역거점** 조성(해양레저관광도시)
 - * “기반시설(정부) → 관광·숙박·쇼핑시설(민간) → 도시 확대” 선순환으로 도시 자생력 확보
- 주요 연안에 해양레저를 지원하는 **대규모 마리나**를 확충(6→10개소) 하고, 도서 지역에 **바다역(驛)** 구축 검토(K-마리나루트)
 - * 휴게소 기능의 계류시설, 수리소·샤워장 등 편의시설, 관광시설을 체계적으로 구축

2. 기업·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해양관광산업 육성

- 마리나 비즈센터와 연계한 **마리나산업 클러스터** 조성(부산, 통영 등)
 - * 호주 골드코스트 : 보트 제작·판매·대여·수리업체 + 인력양성기관 유치 → 연관산업 상생
- 생태·치유·낚시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**콘텐츠 다변화** 및 저변 확대
 - * 국가해양정원(서산·태안 가로림만, 포항 호미반도 등),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(신안), 해양치유센터(4개소 : 완도, 태안, 울진, 고성), 낚시복합타운 추진 검토

3.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산업 중심지 구축 및 글로벌 브랜드화

- **남해안권(부산·여수·제주 등 연계)**을 대표 **해양레저관광벨트**로 조성
 - * 부산북항 재개발, 크루즈터미널, 거점형마리나, 마리나비즈센터, 지역별 대표 관광인프라 활용
- 크루즈 입항 재개(‘23.3) 계기, **인프라 복구, 지역관광상품 연계** 등 추진
 - * 부산·제주 등의 CIQ 장비·인력 및 터미널 시설 정비,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

‘23년
중점과제

- ▶ [정책] “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” 마련(‘23.2)
- ▶ [정책] “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” 수립(‘23~’24)
- ▶ [법률] 「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기본법」 제정 추진(‘23~)

5. 살기좋은 섬, 연안지역을 조성하겠습니다

◇ 소외되어 왔던 섬·연안지역 주민의 **균등한 기회 보장**과 **민생 안정**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, **지속가능한 지역 성장**을 위한 투자 확대

* 유인도서 : 464개 / 유인도서 주민 : 82만명(전체 국민의 약 1.6%)

1 소외된 섬 거주민 교통·물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

- 그간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되어온 섬 주민의 **교통 기본권 보장**
 -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**소외도서(40개)**를 **제로화('23, 10개)**하고, 중단 우려 항로의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(35→40개, '23, 198억원)
- **택배 차량 선적료**로 인해 섬지역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 왔던 '**택배 할증료**'(건당 평균 5천원)를 **경감('23, 65억원)**

2 어촌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소득안전망 구축

- 수산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**소규모 어가(약 2.2만호)·어선원(약 1.5만명)** 대상으로 **직불제(가구당 연 120만원) 신규 도입**
- **어촌생활돌봄 활동비와 연금 보험료 지원단가**를 현실화하고, **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실시(만 45세이상, '23, 1,800명)**

3 어촌지역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

- 어촌 지역의 **경제(수산물 유통·가공, 판매, 관광), 생활(빈집 리모델링, 헬스케어), 안전(방파제) 인프라**를 **종합적으로 개선**
 - * 5년간('23~'27) 총 300개소 3조원 / 유형별로 개소당 50~300억원 지원
-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'**어촌·어항 활력펀드**'를 조성('23, 계획 수립)하고, **어항시설내 업종 규제**를 개선

'23년
중점과제

- ▶ [법률] 「수산직불제법」 개정('23~)
- ▶ [사업] “어촌신활력증진사업” '23년 대상지역 선정('23.1)
- ▶ [정책] “연안교통 혁신대책”수립('23.3)

6. 기후변화 대응,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을 조성하겠습니다

◇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, 월파·침수, 이안류 등 연안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**해양-연안 통합 해수면 관리체계** 구축

* 연안에 1,430만명 거주 / 자연재해 피해액의 40.4%가 연안에서 발생('12~'20, 1.5조원)

1 연안재해 예·경보 시스템 “K-Ocean Watch” 구축

○ 해양변화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관측·예측하여 연안재해를 조기에 경보하는 체계 구축, 재해대응 골든타임* 확보('23년 예타, 2,700억원)

* 예측주기 단축(3시간 → 30분), 정밀도 향상(시·도 → 읍·면·동)

▪ 외해 스마트 관측망 설치, 무인 관측장비 개발로 이상징후 신속 포착, 지역별 맞춤형 재해예측으로 사전 위험정보 제공

2 항만·연안지역 재해 안전시설 완비

○ 100년 빈도 재해(파랑)에도 안전한 항만 구축

▪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방파제 등 외곽시설 보강, 월파·침수 방지를 위한 방호벽 설치, 방재언덕 조성 등 취약지구 정비

○ 재해위험 연안의 토지를 매입, 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 공원으로 활용하는 “국민안심해안” 조성('23, 시범사업 2개소)

3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

○ 민간·공공* 합동으로, 분산된 연근해 해양정보와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는 “연안 빅데이터 플랫폼” 구축(~'24, 84억원)

* (20개 기관) 16개 기업, 2개 공공기관(KIOST, 인천항만공사), 2개 대학(인하대·경북대)

○ 굴폐각 소재 방파제 설치, 갯벌식물 식재 등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 조성 기술 개발 및 서·남해안 실증(3개소) 추진('23~)

'23년
중점과제

- ▶ [사업] “K-Ocean Watch” 예비타당성 조사('23.1)
- ▶ [정책] “기후변화 대응 안전항만 구축계획” 수립('23.2)
- ▶ [사업] “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” 테스트베드 실증('23.10)

IV.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

1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해양수산업

□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시스템 강화

- (규제혁신과제 발굴)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(11.9)에서 발표한 83개 과제 이행 및 신규과제 지속 발굴(자체 전략회의)
- (현장 소통형 발굴·개선) 정책혁신 현장 발굴단, 업·단체 토론회 및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해양수산업 현장 애로를 집중 점검·개선

□ 핵심규제 철폐·개선으로 민간 주도의 역동경제 실현

- ① (항만배후단지 활성화) 항만배후단지(1,569만㎡, 여의도 면적 5.4배)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신속·과감하게 해소
 - 물류기업의 제조업 겸업 허용 및 지분양도 금지 해제('23.1, 지침개정)
 - 위험·유해시설 외 모든 시설 입주 허용('23.下, 항만법시행령 개정)
- ② (신산업 육성) 미래 유망 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완화
 - 자율운항·친환경 선박 실증 특례 적용으로 상용화 가속화('23.下,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/ '23.下, 규제특례법 개정, 중기부 협업)
 - 의약 및 기능성 바이오 제품 개발을 위한 해양생물 특화 소재 안전성 평가 기준 마련('23.下, 식약처 협업)
- ③ (어촌활력 증진) 어촌·어항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
 - 민간이 어항과 배후지역을 통합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어항시설에 쇼핑센터, 음식점 등 설치 허용('23~, 어촌어항법 개정 추진)
- ④ (어업자율 제고) 복잡한 거미줄 규제를 산출량 관리제로 단순화
 - 어획량을 정확히 보고하도록 하되, 기존 어업규제(어구, 어선 톤수, 어선 검사, 조업시기 등 제한)는 대폭 개선('23.下, 책임어업법 제정)

2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양수산업

□ “일 + 주거 + 정착 패키지” 지원으로 청년 만족 어촌 조성

- (일자리) 어촌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선(‘23, 10척)과 양식장*을 임대 제공하여 진입 장벽 완화

* 공공기관이 확보한 양식장을 임대 제공하기 위한 근거 마련(‘23.下, 양식산업발전법 개정)

- (주거) 빈집 리모델링, 임시 주거시설 제공으로 이주부담 완화

- (정착) 초기정착 교육기관인 “귀어학교” 확대(전국 6→8개), 창업·주택구입 용자* 및 청년어촌정착지원금 확대**로 정착 지원

* 창업 3억원, 주택 0.75억원(금리 2.0%) / ** (‘22) 월 최대 100만원(3년간) → (‘23) 110만원

□ 글로벌 해운물류 강국을 선도할 “2030 장보고 양성 프로젝트” 추진

- (청년 선원) 국적 선원 유지를 위한 선원채움공제* 도입(‘23, 계획 수립), 대체고용(외국적 → 국적)시 임금차액 일부(최대 1,500만원) 지급

* 본인·선사 각 1,000만원, 정부 2,000만원 적립 → 5년 만기시 4,000만원 수령

- 해상원격진료(160척), 승선 교대주기 단축 등 복지 강화 추진

- (차세대 전문가) 해양모빌리티 전문인력 5,000명(5년간)을 양성하고, 금융기법 고도화에 따른 핀테크 등 해운금융 매니저 육성(‘23, 30명)

□ 해양수산 유망 스타트업 2,000개사(5년간) 육성

- (창업) 스타트업 발굴부터 육성·투자 유치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민간 전문회사(창업기획자 4개사), 창업투자센터(7개소)를 통해 창업 활성화

- (사업화) 창업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, 기술 고도화, 실증, 제품화, 해외 인증 등 지원(~’25, 총 640억원)

- (투자) 해양수산모태펀드를 5,000억원 규모로 확대*하고, 유망기업의 민간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투자사 협의회(43개사), 투자박람회 개최

* (‘22) 3,517억원 → (‘23) 3,803억원 → (‘27) 5,000억원